



발행일 2020년 2월 18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Parliamentary Diplomacy: Trends and Analysis

1. 국회의장, 주한 중국대사 예방 받아



2020년 2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오늘 첫 인사를 오신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서한에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싱 하이밍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 정당, 기업이 모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감동적이었고 고맙게 생각한다. 중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싱 대사는 “중한 양국은 운명공동체로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함께 극복하면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사는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를 당부한 문 의장 주문에 “한국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II.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현황과 시사점

1. 들어가며

가뭄, 홍수, 대형 산불 등 기상이변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재난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중 온실가스 감축 정책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을, 주요국의 2050년 감축목표설정·석탄화력발전 및 내연기관차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의회외교 차원에서 대응할 방향과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논의 동향

(1) 2050년 감축목표 논의 현황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1)에서 19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당사국들이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pre-industrial levels) 2°C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상승을 제한하도록 하는 노력을 추구해야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C)의 요약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가 1.5°C 이내로 상승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만큼 흡수 노력을 기울여 ‘순 제로’(Net 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4조 제18항과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정(Decision 1/CP.21, paragraph 35)은 파리협정의 당사국들이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 term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¹⁾

영국의 경우 2018년 유엔에 제출한 2050년 감축 목표는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명시된 1990년 대비 80%였다.²⁾ 그러나 영국은 2019년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의 권고에 따라 기후변화법을 개정하여, 2050년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80%에서 100%로 수정한 바 있다.³⁾

2019년 9월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 2019)에서 프랑스는 파리협정에 반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독일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⁴⁾

유럽연합은 2019년 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폴란드를 제외한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하여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되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⁵⁾

1) 2020년 2월 7일 기준으로 14개국이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캐나다, 독일, 멕시코, 미국, 베닌, 프랑스, 체코, 영국, 우크라이나, 마셜제도, 피지, 일본,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제출 순서 순)
UNFCCC (최종검색일: 2020.2.7.)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long-term-strategies>>

2) UK Government,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lean Growth Strategy”, Oct 2017.

3) UK Legislation (최종검색일: 2020.2.7.)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8/27/part/1/crossheading/the-target-for-2050>>

4) 외교부, 『한눈에 보는 2019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2019년; UN, “Summit delivers major step up in national ambition and private sector action on pathway to key 2020 climate deadline”, *Press Release*, 23 September 2019.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2050년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 포럼은 2017년 대비 2050년 75%(제1안), 69%(제2안), 61%(제3안), 50%(제4안), 40%(제5안) 감축안을 부분별 감축목표와 함께 제시하였으나, ‘탄소중립’안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목표로만 언급하고 있다.⁶⁾

탄소중립 목표의 논의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기업 차원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코펜하겐은 2025년 최초의 탄소중립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⁷⁾ 중국 광둥성·홍콩·마카오도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5월 대만구 녹색금융연합(The Greater Bay Area Green Finance Alliance)을 결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주요 다국적 회사들에게 2050년까지의 순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⁹⁾ 이에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과거부터 배출했던 모든 배출량을 상쇄하겠다고 밝혔다.¹⁰⁾ 참고로,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도 2030년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고 있다.¹¹⁾

5) 이혜경,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동향과 분석』, 2020년 1월 29일.
 6) 환경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보도자료, 2020년 2월 4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저탄소 발전전략, 말뿐인 ‘탄소중립」, 2020년 2월 5일.
 7) David Nikel, “Copenhagen Aims To Be World’s First Carbon Neutral Capital By 2025”, *Forbes*, 22 August 2019.
 8) 정재용, 「중국 광둥성·홍콩·마카오, 탄소 배출 감축 위해 손 잡는다」, 『연합뉴스』, 2020년 1월 21일.
 9)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 asks all Davos participants to set a net-zero climate target”, 17 Jan 2020.
 10) David Gelles & Somini Sengupta, “Big Business Says It Will Tackle Climate Change, but Not How or When”, *New York Times*, 23 January, 2020.
 11) LG전자, 「LG전자,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보도자료, 2019년 5월 20일.

(2)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동향

2015년 영국은 2025년까지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unabated)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석탄발전의 종식을 가장 먼저 선언한 나라가 되었다. 영국은 1990년에 전력의 70%를 석탄에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3% 수준으로 낮았으며, 최근에는 2025년까지였던 석탄 화력발전 종료 시점을 1년 앞당겨 2024년까지로 제시한 바 있다.¹²⁾ 또한 영국은 캐나다 등과 함께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주도하고 있다.¹³⁾ 탈석탄동맹과 지구 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한 세계 지자체 연맹(Under 2 Coalition)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우리나라 충청남도도 각각 2045년과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종식을 선언하였다.¹⁴⁾

참고로, UNCTAD의 최근 보고서(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0)는 지구 석탄 소비의 75%를 차지하는 아시아에서는 유럽과 북미와는 달리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높고, 중국·인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호주·한국 등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계속 건설 중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해외 석탄화력에 수십억 달러의 수출신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¹⁵⁾

12) UK Prime Minister’s Office, “PM speech at COP 26 Launch”, 4 February 2020.
 13) 2019년 12월 10일 기준으로 탈석탄동맹에는 33개 중앙정부, 27개의 지방정부, 37개의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Powering Past Coal Alliance (최종검색일: 2020.2.11.) <<https://poweringpastcoal.org/about/members>>
 14) State of California, “Executive Order B-55-18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10 September 2018; 충청남도, 「동아시아 최초 ‘충청남도 기후 비상상황’ 선포」, 보도자료, 2019년 10월 22일.
 15) 토드 스텐, 「[기고]석탄 화력발전 신규 건설은 한국과 일본뿐」, 『동아일보』, 2019년 2월 15일.

(3) 내연기관차 정책 동향

자동차의 대기배출규제를 강화하거나 전기차·수소차 등의 친환경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경유·휘발유 등 화석연료로 구동하는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 자동차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한 발 더 나아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2040년부터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¹⁶⁾ 2020년 영국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2050년 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부터 금지 할 예정이었던 경유차·휘발유차의 판매를 2035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도 금지될 예정이다.¹⁷⁾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2040년 내연기관차를 종식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 안전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¹⁸⁾

한편 자동차업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베이징자동차는 2025년 중국전역 내연기관차 판매중지, 도요타와 폭스바겐은 각각 2025년과 2040년 내연기관차 생산중지, 볼보는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⁹⁾ 반면 우리나라 한 자동차 업체가 2025년 판매목표에 내연기관차 비중을 90%로 하고 있는 점이 기후위기대응에 미흡함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었다.²⁰⁾

16) Angelique Chrisafis & Adam Vaughan, "France to ban sales of petrol and diesel cars by 2040", *Guardian*, 6 July 2017.
 17) "Petrol and diesel car sales ban brought forward to 2035", *BBC*, 4 February 2020; 2032년으로 판매금지가 앞당겨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Jasper Jolly, "UK could ban sale of petrol and diesel cars in 12 years, says Shapps", *Guardian*, 12 February 2020.
 18) 김준영, "[단독]환경부 "2040년까지 가솔린·디젤차 퇴출" 보고서 뒤 빠진", 『중앙일보』, 2019년 7월 4일.
 19) 이원호, 「내연기관차 종말에 대비하자」, 『중소기업신문』, 2019년 6월 4일. Johannes Hellstrom & Simon Johnson, "Volvo Cars aims to be climate neutral by 2040", *Reuters*, 16 October 2019.
 20)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현대차 6년 뒤에도 내연기관차 비중 90%...기후위기 나몰라라」, 보도자료, 2019년 10월 28일.

3. 나가며

우리나라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유치하였다.²¹⁾ 2020년 6월 개최 될 P4G회의는 2019년 11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5)와 2020년12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²²⁾ 그런데 COP26의 유치국인 영국은 다른 나라도 탄소중립목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²³⁾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파리협정하의 국제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국내외 지적이 존재한다.²⁴⁾

우리나라가 기후 외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방안 수립 시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에 부합하는 장기적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반영한 의회외교 활동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혜경 입법조사관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은 국회의원의 의회외교 활동 동향 및 비전에 대해 주간으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21)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 Global Goals 2030)는 기업·시민사회 등의 민간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외교부·환경부, 「2020년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 및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19년 12월 18일.
 22) 유연철, 「〈문화논단〉 녹색성장 위한 '서울 정상회의」, 『문화일보』, 2020년 1월 29일.
 23) Fiona Harvey, "Boris Johnson urges major economies to go carbon neutral by 2050", *Guardian*, 4 February 2020.
 24) Karl Mathiesen, "South Korea leads list of 2016 climate villains", *Climate Change News*, 4 November 2016. Park Ki-yong, "S. Korea abandons international carbon neutrality declaration", *Hangyoreh*, 6 February 2020.

